

다산포럼



이동림 동덕여대 중어중국학과 교수

코로나19 팬데믹은 인류의 예상을 넘어선 초유의 도전이 되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 국제 질서는 더욱 불확실하고 불안정해지고 있다. 국제사회의 양 초강대국인 미국과 중국은 팬데믹 상황에서 국제 협력을 이끌어 내는 글로벌 리더십을 보여 주기는커녕 정치권력과 국익 확보를 위한 예측 불가의 치열한 대치를 지속하고 있다. 냉전이 종식되고 30년이 지나 인류가 공동 번영의 새로운 질서를 구축해야 마땅한 시점에 오히려 '냉생전'이 유행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코로나19로 가열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간 세력 경쟁은 한반도에도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지구적 냉전 종식에 불투명하고 지난 30년 한반도만은 유독 냉전의 질곡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2018년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의 연이은 개최로 가졌던 한반도 냉전 종식의 기대

코로나19와 한중 관계 그리고 한국 외교

는 코로나19 팬데믹과 미·중 갈등의 심화라는 격변으로 중대한 도전에 직면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혼돈에도 유독 한중 관계는 코로나19가 계기가 되어 오히려 관계 개선의 모멘텀을 갖게 되었다. 주지하듯이 한중 관계는 2016년 사드 배치를 둘러싼 갈등으로 수교 이래 최악으로 악화된 이후 최근까지도 쉽사리 회복하지 못하고 있었다. 한중 양국은 코로나 발생 초기 출입국 차단을 둘러싼 논란이 있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상호 협력의 계기와 동력을 만들어준다는 의지를 확인하는 성과를 거뒀다.

한중·일 3국 외교장관 화상회의와 한중 간 코로나19 대응 방역 협력 대화, 기업인 입국 간소화 절차 수립 등은 국제적 각자도생의 분위기 속에 중요한 협력 사례로 평가된다. 그리고 차체에 한중 간 방역 협력을 비롯한 다양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대응하는 협의체 구성으로 발전시켰으면 한다. 그리하여 위촉된 양국 간 전략 대화를 재활성화하고 한반도의 불확실성을 함께 논의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그런데 한국과 중국이 새로 협력의 계기가 마련된 현실에서 지난 28년의 한중 관계를 냉철하게 돌아보지 않을 수 없

다. 한중 관계는 수교 이후 경제 교류를 바탕으로 비약적인 양적 발전을 이루었지만 정치 외교 관계는 마치 툴레코스터를 타듯 혼란스러운 기복을 반복해 왔다. 한중 관계의 복잡성의 이면에는 한반도가 여전히 냉전의 고도로 남아 있는 구조적 한계, 즉 북핵 문제와 미·중 세력 경쟁이라는 외생변수가 양자 관계에 지배적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은 중국과 코로나 대응 협력 과정에서도 양국 관계를 압도하고 있는 외생변수를 함께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최근 중국의 주변 외교 활성화와 한국과의 협력 시도 역시 미국과의 경쟁 차원에서 전개되는 것이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위기를 겨냥한 미·중 간의 역대 세력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외생변수가 한반도와 한중 관계에 미치는 영향의 영역과 강도는 예상외로 넓고 강력해질 수 있다.

국제 정세의 유동성에 매우 민감하고 취약한 지정학적 특성이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 중장기적으로 다양한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예측성, 전략적 유연성, 그리고 인내심을 키우며 대비해야 한다. 한국은 그 어느 때보다도 대미 외교, 대중 외교, 대북 정책을 복합적으로 고려하며 종합적인 전략과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해 강대국 리더십의 약

화 또는 부재 시기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한국과 같은 중견국 또는 중견국 연대의 역할과 위상이 부각될 여지가 있는 만큼 한국의 외교 활동을 중견국 연대에 보다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전개할 필요가 있다. 마침 한국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미국과 유럽은 물론이고 중국과도 차별화된 '한국형' 대응 방안, 즉 개방성과 투명성을 유지하면서도 효과적인 방역 효과를 획득한 특별한 자산을 축적했다.

한국이 획득한 방역의 경험 자산을 국제사회에 제공하면서 한국의 전략 가치와 위상을 확보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런데 자칫 'K 방역모델'의 지나친 과시가 오히려 국내외적으로 역풍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런 만큼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시민사회와 의료계가 전면에 나서고 정부가 뒤에서 지원하는 공공외교의 방식에서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해가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방역 협력을 매개로 한국이 한·중·일, 한·미·중, 한·일·미·중 등 다양한 소다자 협력 공장을 확대함으로써 한반도에서 외생변수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한국의 독자적 전략 가치를 확장하는 기회를 포착해야 할 것이다.

NGO칼럼



김중림 광주환경운동연합 사업국장

대한민국 핵연료 폐기물(사용 후 핵연료) 관리 정책의 향방을 좌우할 공론화가 시작되었다. 지난 5월 23일 전국 각 시도 14곳에서 '사용 후 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원회)가 사용 후 핵연료 관리 방안에 대한 전국 공론화를 시작하였다. 재검토위원회는 여론조사 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4월 17일부터 5월 1일에 걸쳐 전국 공론화에 참여한 시민 참여단을 모집하고 선정하였다.

국민 모두에게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실로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 전국적인 의견 수렴이 시작되었지만 우리 국민 대부분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 사용 후 핵연료가 도대체 무엇인지, 얼마나 위험한지,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어디

핵폐기물 공론화 이대로는 안 된다

에 얼마나 있는지, 왜 공론화를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어떤 홍보도, 여론 확산도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전국 공론화를 시작한 것이다.

사용 후 핵연료라고 불리는 이 위험한 핵 쓰레기 문제는 아직까지 어떤 국가도 안전하게 처분할 방법과 처분장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인류가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숙제이다. 10만 년 이상 생태계로부터 철저히 격리시켜 관리해야 하는 핵 쓰레기 문제에 대해 고작 2주 만에 시민 참여자를 모집하여, 각 권역별로 나누어 6일간 단 2회의 종합 토론회로 전국의견 수렴을 진행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공론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사실 '사용 후 핵연료 관리정책 공론화'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박근혜 정부 초기에 '사용 후 핵연료 공론화위원회'가 운영된 바 있다. 하지만, 당시에 한쪽으로 치우친 공론화 위원 구성과 비민주적인 운영으로 20개월간 진행된 일방적인 공론화는 '그들만의 엉터리 공론화'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2016년 7월 원자력진흥위원회는 '고준위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을 심의·확정하였다.

이후 시민사회와 핵발전소 지역대책위 등은 박근혜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된 '사용 후 핵연료 공론화'의 부당성, 비민주성 등을 지적하며,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철회 및 재공론화' 주장하였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사용 후 핵연료 정책 재검토'가 받아들여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 준비단이 출범하였고, 재검토 위원회가 구성되었다. 하지만,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다시 시작한 공론화도 박근혜 정부 때 진행된 공론화 과정과 별반 다르지 않아 '가짜 공론화'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해 보인다.

핵연료 폐기물 관리 정책은 현세대 대다수 국민들과 특정한 수 없는 미래 세대의 삶뿐만 아니라, 인간과 더불어 살아가는 숲한 동·식물의 터전인 자연 환경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이다. 그리고 기술적 불확실성과 위험의 장기성, 광범위한 영향과 피해 가능성, 이해관계의 복잡성 등으로 인해 기술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윤리적·사회적·경제적·정치외교적인 측면 등을 함께 심도 있게 고려해야 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그래서 영국, 핀란드, 스웨덴, 캐나다

등의 나라에서는 공론화 과정을 설계하는 데만 수년이 걸렸으며, 논의 과정도 수십 년을 넘기기도 하였고, 심지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진행형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산입부와 재검토위원회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공론화를 중단하고 정부로부터 독립된 권위와 책임을 가진 전담 기구로서,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재공론화의 운영 주체를 재구성해야 한다. 그리고 핵연료 폐기물 문제에 대해 국민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교육, 홍보 등)가 마련되어야 하며, 핵연료 폐기물의 영향을 받는 직접적인 당사자인 다수의 시민들에게 자신의 문제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 복잡하고 다양하며 특별한 문제를 충분히 다룰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다. 공론화 주체들은 그 역할에 책임과 도덕성을 가지고 참여하면서 충분한 학습과 숙의적 토론을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론화 과정을 거친 결정이라 할지라도 치명적 문제점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려 다시 시작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진짜 공론화이다.

기고



박형철 예방의학 전문의·전 국립소록도병원장

조선시대 전라도 관찰사 관할 하에 제주목(濟州牧)이 있었다. 제주시 소재 '제주목 역사관'에 가면 제주목 600년의 역사가 오롯이 기록되어 있다. '제주목사, 선정을 베풀다' 코너에는 12명의 목사(牧使, 그중 제일 앞에 기건(奇健) 목사가 위치해 있다. 세종 25년~27년까지 재임한 기 목사는 청백리로 칭송되고, 이어지는 동영상에는 당시 제주일대에 나타난 나질(한센병)로 고통받은 주민들을 어떻게 사랑으로 돌봤는지 그리고 있다.

지금의 의학으로 보면 한센병은 치료 가능한, 조기 발견과 치료로 후유 장애 없이 낫는 감염성 질환이다. 질병의 원인이나 증상, 예후가 달라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당시 한센병은 요즘 코로나19 버금가는 질환이었을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제주목은 공공의료 시

질병관리청 시대의 지방 공공보건 조직

설계인 구질막(救疾幕, 치료소)을 만들고 감독과 치료에 전념하게 하였다. 전문 인력이라 할 수 있는 의생 등으로 하여금 치료에 전념하게 하는 등 시선, 인력, 조직 모두를 갖추었음이 분명하다. 인도주의, 공공의 접근이 바탕이었으며 조선 특히 세종시대의 해안이 돋보이는, 현대에 견주어도 결코 뒤지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오늘날 국가 차원의 기구를 보면 건강을 보건사회부, 보건복지부 등이 맡았고 명칭이나 실제에서 보듯이 사회적 접근, 복지적 접근이 주류를 차지하였다. 지금 코로나 극복의 최고 기구인 질병관리본부도 전신인 국립보건원에서 사스 발생 후 차관급 조직으로 승격했다.

지방 조직의 협주소는 어떻게? 감염병의 최전선에서 활약 중인 사·군·구 보건(지)소는 진료 의사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린다. 진료 의사도 구하지 못하는데 감염병, 만성병 대치를 위한 공공의료 의료인을 구하기는 안감생심이다.

광역시 조직을 보면 복지건강국이라는 조직 아래 건강정책과, 1개 과에 불과하다. 위상도 복지나 여성, 인구의 부수 조직을 먼저 못하고 있다. 분야 책임자도 보건이 아닌 복지나 행정이 담당하고 있

어 소통이나 적기 의사결정이 더딜 수도 있다. 전문성 측면에서 교수나 전문가며 리를 발리는 정도가 전부로 보인다. 민관학 협력을 나누라는 것이 아니다. 파드너 심은 분명히 필요하다. 오랜 법적 근거의 전문 방역관 한 명도, 예방 의학이나 공중보건을 전공한 의사 한 명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일부 직렬을 제외하곤 전문인력이 보충하고 있다.

열악한 가운데 이번 코로나 정국에서 광주광역시와 성과는 돋보인다. 공공의료원 설립 계획도 비교적 시의적절해 보인다.

국내의 전문가 일부는 코로나의 일상화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질병관리청(가칭) 출범을 목전에 둔 광역 시도는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보건 조직의 한두 자리 보강이 아닌 큰 그림을 그려야 하고 이를 위한 혁신 사고와 행동이 필요하다. 조직과 기구, 시스템 및 전문 인력 삼박자가 긴요하다.

얼마 전 대통령의 질병관리청(가칭) 승격 발표가 있었다. 새로운 감염병 등 건강 문제에 현재 질병관리본부 정도의 조직으로 감내해 낼 수 없겠다는 판단하에 새로운 비전과 미션을 제시한 것일라고 할 수 있겠다. 각 매체에서는 바뀌어

社說

백운교차로 교통대란 실효성 있는 대책을

광주 백운 고가차도 철거가 시작되면 서 우려했던 차량 정체 등 교통대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에 따르면 남구의 관문 역할을 해 온 백운 고가차도의 철거 공사가 모래부터 시작되면서 모래 차량의 통행이 통제된다. 고가차도가 위치한 백운교차로는 2018년 기준 광주에서 12번째로 교통량이 많은 곳이다. 일일 교통량은 14만여 대로, 이 가운데 5만 3000여 대가 고가차도를 이용했다.

특히 이곳에서는 지난해 11월부터 도시철도 2호선 건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인근에는 각종 아파트 공사까지 추진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고가차도 진입이 통제되면 기존에 이 도로를 이용하던 차량들이 지상 도로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교통 체증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고가차도 구조물은 오는 11월까지 철거되지만, 지하차도와 도시철도 공사가 2023년까지 이어지면서 교통대란 장기화가 우려된다.

이에 광주시는 진월동 서남대로에서 봉선동 대화아파트로 바로 갈 수 있는 우회 도로를 건설하고, 제2 순환도로 진월 IC 진출입로를 개선해 교통 혼잡을 줄일 계획이었다. 하지만 우회 도로는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부지 확보조차 되지 않아 언제 공사를 시작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진월 IC 진출입로 개선도 백운교차로 공사가 끝나면 2023년이나 완공될 예정이다. 따라서 당장 교통난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은 없는 실정이다.

광주시는 공사가 입막한 옛것제서야 우회로 활용, 추가 차로 확보, 신호체계 변경 등의 구체적인 대책을 내놔지만, 출퇴근 시간 등에는 교통체증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가 철거에 따른 교통 혼잡은 오래 전부터 예상되었던 것인데도 대책 마련을 소홀히 한 것은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 광주시는 보다 실효성 있는 보완책을 세워 시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시 체육회장 출연금 조정 명백한 꼼수 아닌가

광주시체육회가 사무관리 규정을 개정, 회장 출연금을 2억 원으로 줄여 논란이 되고 있다. 체육회는 최근 산하 자문기구인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무관리 규정을 개정했다. '민선 초대 회장부터는 첫 번째 정기총회 전일까지 출연금 2억 원 이상을 본회에 출연해야 하며, 출연금은 회장 업무추진과 품위 유지를 위해 집행해야 한다'고 내부 규정을 수정한 것이다.

이처럼 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김창준 광주시체육회장은 첫째 2억 원만 내면 규정 위반을 피할 수 있게 됐다. 회장은 매년 정기총회 전일까지 출연금 2억 원 이상을 본회에 납부해야 한다'는 원래 사무 규정 제71조에 의하면 김 회장은 임기 3년 동안 6억 원 이상의 출연금을 납부해야 했다.

사무규정 제71조는 지난해 11월 14일 열린 제28차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당초 사무규정에는 없었다. 하지만

민선 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열악한 지역 체육 재정 여건을 감안, 출연금 조항이 신설됐으며 이는 당시 선거 후보였던 김 회장 등 모두가 동의한 사항이었다.

그럼에도 올해 1월 선거에서 당선된 김창준 회장은 올해 2월 5일 열린 대의원 총회 전날인 2월 4일까지 내야 할 출연금을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출연금을 매년 2억 원씩 납부해야 할 경우 자금 여유가 없는 경기인 출신 체육인들은 향후 체육회장 입후보조차 할 수 없게 된다는 주장에 따라 규정을 개정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응은 싸늘하다. 특히 회장실 갈 때와 나올 때처럼 달려서야 되겠느냐며 시선과 도덕성 문제를 지적하는 체육인들도 많다. 논란이 되자 김 회장은 '2억 원을 내고 금액이 소진될 경우 추가적인 납부를 하겠다'고 말했다지만 개정된 규정은 차기 회장부터 적용하는 게 순리일 것이다.

無等鼓

지난 2008년 4월 어느 날 해 질 녘. 회사 옥상에 올라 하늘을 보며 국제우주정거장(ISS)이 나타나길 기다린 적이 있다. 당시 한국 최초의 우주인인 이소연 씨가 러시아의 소유즈 우주선을 타고 지구 궤도로 나가 ISS에 머물고 있을 때였다. 우주정거장은 예고한 시간과 위치에서 정확하게 나타났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서쪽 하늘을 가로질러 사라졌다. 지상에서 바라보는 우주정거장은 밝은 별과 다르지 않았다. 우주정거장은 지상 350km 상공에서 초속 7.7km 속도로 지구 주위를 선회하고 있었다.

민간 우주탐사

우주로 나간 최초의 민간 우주비행사가 유리 가가리이다. 1961년 4월 '보스토크 1호'를 타고 지구 밖으로 나갔다 돌아온 그는 "지구는 푸른빛이었다"는 말을 남겼다. 불과 23일 뒤에는 앨런 셰퍼드가 미국인 최초로 우주비행을 실시했다. 이후 미국과 러시아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국가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여 우주 개발 경쟁을 펼쳤다. 전 세계 13개국이 참여한 우주정거장은 냉전시대의 '대결' 구도를 벗어난 '우주 협력'의 상징물이다. 우주탐사 기업 '스페이스 X'가 지난

31일(한국 시간) 첫 민간 유인 우주선 '크루 드래곤'을 성공적으로 쏘 올렸다. 그리고 두 명의 비행사가 탑승한 우주선은 19시간 후에 국제 우주정거장과 도킹에 성공했다. 국가 주도가 아닌 새로운 민간 우주 탐사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뜻 깊은 유인 우주선 발사와 도킹이었다. 이는 '고파 사업가'로 불리는 테슬라 최고 경영자(CEO) 일론 머스크의 오랜 집념의 결과이기도 하다. 스마트폰으로 발사와 도킹 장면을 지켜보면서 부러움과 조바심을 감정을 동시에 느꼈다.

한국에서도 공공같은 상상력을 바탕으로 우주 사업을 무대로 삼는 '고파 사업가'들이 많이 배출됐으면 좋겠다. 선진국들의 우주 개척의 역사는 유럽 열강들이 경쟁적으로 탐험과 무역에 나섰던 '대항해 시대'를 연상시킨다. 우리 역시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 우주 개척에 뛰어들어야 할 것이다. 우주정거장을 지상에서 바라보는 데 그치지 않고 가까운 훗날 한국형 발사체로 로켓을 발사하고, 우주 정거장과 도킹하는 한국 우주인을 상상해 본다. /송기웅 문화2부장 song@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b>金汝松</b> 주필 <b>李洪載</b> 편집국장 <b>崔宰豪</b>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1(광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국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